

이 보도자료는 2011년 10월 21일 오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6 웨스턴타워 4동 8층

담당부서 :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  
사진없음  사진있음  본문: 총 10쪽

답	당	정기선 실장	031) 920-5630
---	---	--------	---------------

**제 목** : IOM 이민정책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움 공동 개최

## IOM 이민정책연구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를 다각적으로 논의

### - 행사개요 -

- 아시아 국제이주에 관한 학술협력 추진 양해각서(MOU) 체결
  - 일시: 2011년 10월 21일 (금) 11:30
  - 참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찰스한스 원장-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내영 소장 등
  - 협약내용
    - 이민문제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협력 추진
    - 정보교환 및 교육과 학술회의 등 공동 기획 추진 등
- 학술 심포지움
  - 일시: 2011년 10월 21일 (금) 13:30 ~ 18:00
  - 장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주제: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
  - 진행: 고려대학교 김남국, 김은기교수
  - 참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

- IOM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찰스 한스, Dr. Charles Harns)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이민에 관한 연구 및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2011.10.21(금)오전 11시30분에 체결하고 이어서 오후 1시30분부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의 쟁점과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움(첨부 #1: “심포지움 세부 내용”)을 개최하였다.

- 이번 심포지움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다문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다문화 정책 흐름과 주요 쟁점, 향후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첫 세션에서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2010년 국민정체성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인식, 한국인의 이주민 시민권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한국인의 이주민 유입과 이민의 영향에 대한 태도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첨부 #2 “2010년 국민정체성조사 주요 결과”)

- 두번째 세션에서는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찰스 한스 원장은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아세아문제연구소와의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아시아지역의 이주와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의 심화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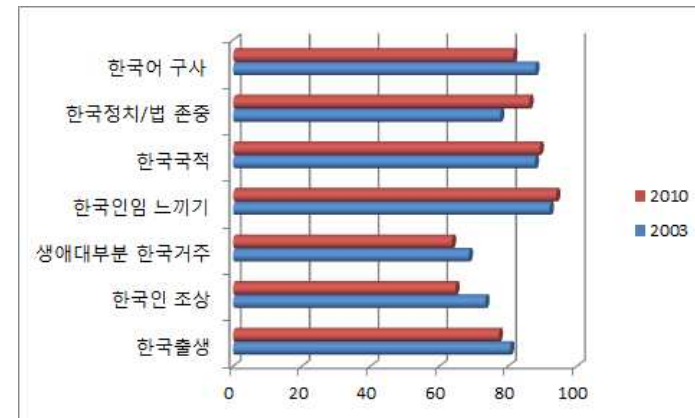
첨부 #1: 심포지움 세부 내용

시간	내용
11:30 ~ 12:00	아세아문제연구소-IOM 이민정책연구원 MOU 체결식
12:00 ~ 13:30	점심식사 (고려대 교내 프로방스)
13:30 ~ 13:40	개회사: 윤인진 (아세아문제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장) 환영사: 찰스 한스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13:40 ~ 15:30	<p><b>제1세션 :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식변화</b></p> <p>사회: 김남국 (고려대)</p> <p>1) 발표자: 정기선·박성일 (IOM 이민정책연구원) 제목: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인식 토론자: 홍태영 (국방대학교)</p> <p>2) 발표자: 이선미 (서울여대) 제목: 한국인의 이주민 시민권에 대한 인식 토론자: 송유진 (동아대)</p> <p>3) 발표자: 김석호·신인철 (성균관대) 제목: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토론자: 서우석 (서울시립대)</p> <p>4) 발표자: 이상림 (IOM 이민정책연구원) 제목: 한국인의 이주민 유입과 이민의 영향에 대한 태도 연구 토론자: 이병하 (연세대)</p>
15:30 ~ 15:45	중간휴식
15:45 ~ 17:45	<p><b>제2세션: “동북아 다문화정책 비교”</b></p> <p>사회 : 김은기 (고려대)</p> <p>1) 발표자: 윤인진 (고려대) 제목: 다문화적 소수자집단과 사회성원권의 재정의 토론자: 한승미 (연세대 국제대학원)</p> <p>2) 발표자: 김인성 (고려대) 제목: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토론자: 정재원 (서울대)</p> <p>3) 발표자: 라경수 (고려대) 제목: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추이와 쟁점 토론자: 안태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p> <p>4) 발표자: 황정미 (고려대) 제목: 가족과 국경 - 한국 다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 아젠다 고찰 토론자: 김민정 (강원대)</p>
17:45 ~ 18:00	종합토론
18:00 ~	저녁식사

첨부 #2: 2010년 국민 정체성 조사 주요 결과

**2010년 국민 정체성 조사 주요 결과**  
IOM 이민정책연구원

□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조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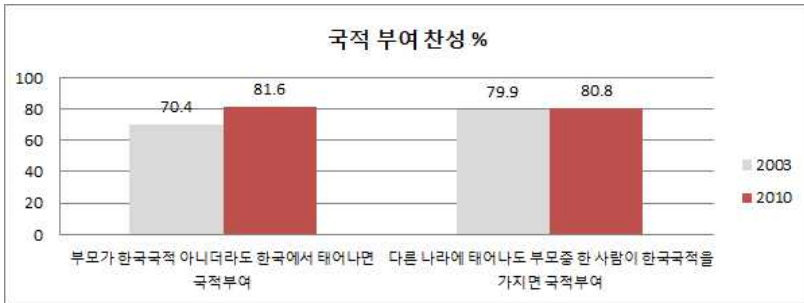


\* 매우 중요함 + 다소 중요함을 합산한 결과임.

-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인임을 느끼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음. 특히,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하다는 데에 92%가 동의함. 다른 한편, 한국에서 태어나야하고 한국의 핏줄(조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아야한다는 조건은 2003년에 비해 2010년에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진정한 한국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생득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하고 있으며, 순수 혈통에 근간을 둔 ‘진정한 한국사람’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한국국적 부여: 한국에 태어나는 것 vs 한국인의 혈통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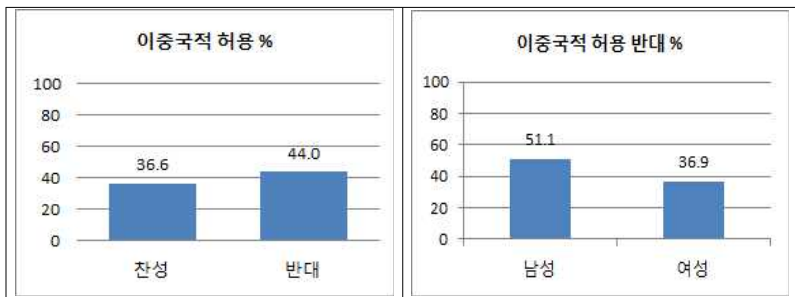


-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데 우리 국민 82%가 동의하고 있음. 국적부여의 조건으로 속지주의를 찬성하는 비율이 2003년 조사에 70%이던 것이 2010년에 82%로 12%p 동의율이 높아짐.

- 동시에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국국적을 가질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속인주의에 찬성하는 비율도 81%로 여전히 중요함.

- 한국인으로서 순수 혈통만을 중시하던 경향은 최근 들어 상당히 약화되고 있으나 또한 동시에 여전히 같은 핏줄에 대한 '우리'의식은 약화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일반 외국인들에 비해 해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감정(동포애)은 여전히 우리 국민정서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중 국적 허용은 반대가 더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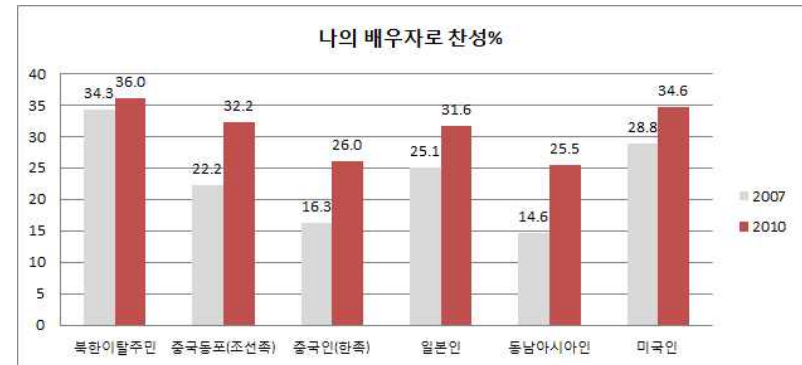


- “누구나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이중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도 좋은 지”를 묻는 질문에 44%에 반대한다고 답함.

- 여성(37%)보다 남성(51%)들 중에 이중국적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음. 우리 나라의 경우 ‘이중국적=군대회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도 해석 가능함.

-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 지난 3년간 우리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얼마나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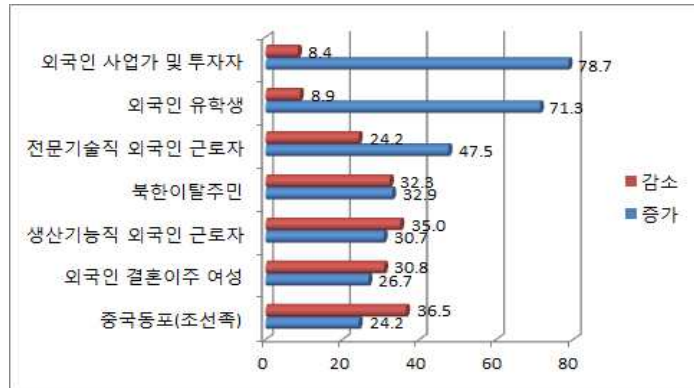
- 2003년에 비해 2010년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을 친밀하게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좋아졌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인이나 중국한족 같이 타 종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친밀감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즉, 동남아시아인이나 중국한족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척도 중 가장 가까운 거리로 느끼는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이 2003년 15%에서 26%로 높아졌으며, 중국 한족도 16%에서 26%로 많이 개선되었음.

-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친밀감 증대는 그간 정부에서 동남아시아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에 비해 선진국 출신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은 것은 여전한. 미국인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겠다는 비율이 35%로 북한이탈주민과 비슷한 수준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

□ 앞으로 외국인을 점차 더 받아들여야한다면 누구를 받아들일까?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유학생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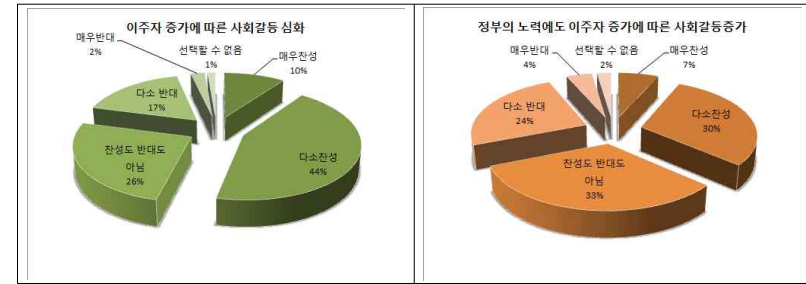
-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 또는 동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할까? 다양한 외국인 집단에 대해 앞으로 이들 집단이 더 증가되어야 하는지, 감소되어야 하는지의 의견을 물어본 바에 따르면, 외국인 사업가나 투자자, 유학생, 전문직 근로자들은 앞으로 더 증가되기를 바라지만, 중국동포나 결혼이주여성, 생산직 외국인근로자는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음.

- 최근 약30만명의 중국동포가 방문취업제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을 하고 있고, 약22만의 외국인근로자가 단순기능인력으로 고용허가제로 취업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민정서에서도 외국인이나 중국동포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 이번 조사에서 읽혀짐.

-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증가하기 보다는 감소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은 국내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게 만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해서 국민정서가 호의적인 것

만은 아님을 엿보게 함.

-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있으며, 이민자 증가로 인한 갈등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염려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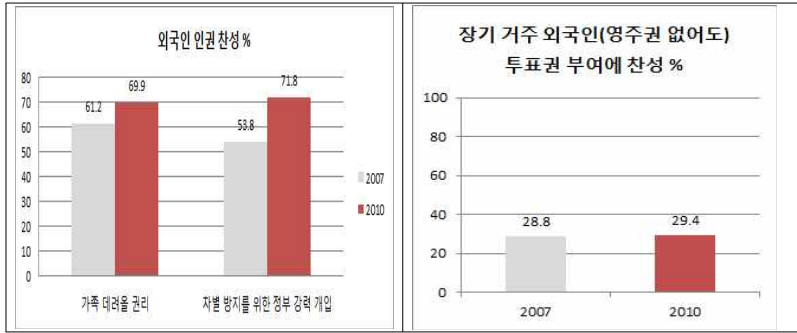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줌으로써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53%)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16%)보다 더 많음.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하는 사람(47%)이 동의하는 사람(28%)보다 훨씬 더 많음. 그렇기는 하지만 2003년에 비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23%에서 28%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줄 것인가?

- 인권적 차원에서의 배려는 수긍하나, 문화권과 정치권은 아직 ...



- 가족동반권이나 차별로부터 보호권과 같은 이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가족을 데려올 권리를 주어야한다 데 동의하는 비율이 2007년에 61%에서 2010년 70%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차별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한다는 데에 찬성하는 비율도 54%에서 72%로 높아짐.

- 반면에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찬성율은 29%로 인권보장에 비해 찬성율인 매우 낮은 편이며, 이러한 태도는 지난 3년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이 형성하게 되는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주는 것(문화권)에 대해서도 인권보장 만큼 적극적인 찬성의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정부가 이들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2003년에는 62%이던 것이 2010년에는 54%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소수인종 또는 민족집단이 그들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소수집단이 전체사회에 적용하고 섞이는 것이 국가에 더 좋다는 의견을 선택한 사람이 48%에서 52%로 약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조사개요

- 2010년 국민정책성 조사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의 특별모듈로 실시한 것임. 다단계지역확률표집을 통해 선정된 전국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7~9월임. 국민정책성 조사는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에 국제사회조사기구(ISSP)의 34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7년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임.

